입장차만 확인…광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 유보'

마라톤협상 끝 2차 조정 결렬
3차 조정 21대 대선 이후 속개
노조, 3차 결렬 시 총파업 진행

광주버스 노사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아무런 소득없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고됐던 노조측의 29일 광주시내버스 총파업은 잠시 보류됐다.

노사 양측은 대선 직후인 다음달 4일 전남지노위 3차 조정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사간 입장차가 너무 커 타결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29일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광주시 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0시 10분께 사측인 광주시 버스운송 사업 조합과의 '협상 결렬' 및 '2차 조정 중단'을 선언했다.

노사는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북구 오룡동 전남지노위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10시간가량 이어진 마라톤협상에도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차 조정 회의에서 사측은 전국 17개 시도 버스운송사업 조합 등과 협의해 '통상임금'과 '기본급'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해 노측은 기본급 8.2% 인상과 통상임금은 추후 협의하자는 조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차 조정 회의 시작 30분 만에 노사간 대립으로 정회가 된 이후 회의 속개와 정회가 반복됐고 급기야 전남지노위 조정위원장이 직권으로 오후 10시 50분께 노사 양측에 '조정 회의 중단'을 요청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양측은 더이상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정을 넘긴 29일 0시 10분께 '2차 조정 회의 중단' 서류에 서명한 뒤 임단협 조정 마감일인 4일 오후 4시에 3차 조정 회의를 시작하기로 한 채 회의장을 떠났다.

박상복 광주 버스노조 위원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인 현 상황에서 9개 버스회사 사장단과 아무런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 교통국장이나 광주시장이 현실적으로 협상장에 나와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6차례 교섭, 2차례 조정에도 사측이 대안을 가져오지 않아 조정위원들이 마지막 7일간의 준비기간을 사측에 제공한 것"이라며 "다음 달 4일까지 사측이 조정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다음날인 5일 첫 차부터 시내버스 총파업에 돌입하고 이어 오후 2시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 시내버스 노조 총파업 선언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지난 26일 오후 6시부터 27일 오전 6시까지 '2025년 쟁의행위(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총조합원 수 1,362명 중 1,091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973명이 파업 찬성표를 던져 찬성률은 89.2%였다.

당초 노조는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될 경우 29일 오전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시민불편을 고려한 전남지노위와 노사 3자간 합의에 따라 다음달 4일 3차 조정회의시까지 파업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

광주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대전·대구 등 타 광역시·도와 임금수준을 맞추고 있었지만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기사 임금과는 맞출 수 없는 재정 상태다"며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할 경우 시민들의 세금 200억원이 인건비로 사용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창구를 통해 접점 타협점을 찾고 있다. 광주시와는 협의하지는 않았다"며 "광주시도 자체적으로 합의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조정시한 마감일인 다음 달 5일 0시까지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임금 8.2% 인상, 정년 63세→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현 재정 상황에서는 노조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본급 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이수민 기자

광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9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대책과 대주주인 더블스타의 신속한 공장 정상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금타 화재' 민노총·시민단체, 공동대책위 구성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지역 시민단체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 사랑과 세상 등 30여곳의 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 참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9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만여 건이 넘는 주민 피해가 접수됐고 2,500여명의 노동자가 생계 위기에 직면했다"며 "사측은 하루라도 빨리 광주공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불안도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노동자 고용불안을 확산시키는 발언으로 노동자의 강력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며 "광주시와 광산구의 책임있는 행정이 요구되며 금호타이어는 광주시민의 사랑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지역사회에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재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노동자 고용 위협 없는 신속한 공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지역혁신플랫폼 국가보조금 26억 챙긴 업체대표·법인 송치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추진 과정에서 26억대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업체 대표 4명과 법인 3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교육부의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보조금 일부를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연구과제의 전체 사업비 규모는 26억원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격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실제 보유하지 않은 기술력을 타 지역 업체를 통해 빌려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업단을 총괄한 대학교수가 연루됐는지도 살펴봤으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송치 처리했다. 최환준 기자

법원 "중경비 수감자 모친 통화 불허, 과도한 제한"

중경비 수감자가 수술을 받은 어머니와의 통화를 제한한 교도소의 조치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전화 통화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교도소는 2024년 8월 22일 여러 질병과 수술 등으로 고생하는 어머니와 통화를 원하는 A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당시 A씨는 전화 통화 횟수가 매달 2회로 제한된 중경비 처우급 수형자로 분류됐는데, 교도소 측은 횟수 초과를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또 A씨가 접견을 통해 통화 신청 목적을 달성했고, 그 신청 사유가 사망 등과 같이 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중경비 처우급 수형자임을 고려하더라도 고령의 노모가 수술한 상황에서 통화마저 제한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가족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최환준 기자

버스회사 전 노조 간부, 해고무효 소송 패소

비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시내버스회사 노동조합 전 간부가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51)가 전남의 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0년 이 버스회사에 입사해 노조 대표를 지냈다. 그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5월 임금 협상 등에서 사측에 우호적으로 임한 대가로 총 8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돼 2023년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에 추징금 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로부터 약 1개월 뒤 A씨를 해고했는데, A씨는 이에 불복해 민사 소송을 냈다. A씨는 배임증재 등 혐의로 자신과 함께 형사처벌 받은 사측 관계자들에게는 별다른 징계가 없었다며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가 배임증재보다 죄질이 더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측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사유 및 정도가 원고와 같은 정도의 비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 등을 문제 삼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환준 기자

쌍촌동 (4층건물) 매매
상가 주택
월수익 520만
보증금 6천만
▶ 원가 급매
13억
9억8천만

장성토지 (담양)

① 장성 토지
장성댐 5분 ,1필지
토목완료,즉시 건축 가능
(240평, 분할 가능)
② 담양 전원토지
창평중 5분 / 전기,수도 완비

상가 매매 (상무지구)
▶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
▶ 유흥가능 (룸,노래홀,홀덤빠)
▶ 6층 (전용 60평)
(보2천,월수익 250만)
시세 8억
급매 4억 (융3억3천)

법원 경매
★ 경매 관심 있는 분
★ 기초 부터 ~
실전까지
특수 전문
(유치권, 법지)

010-6670-9800
062-382-5500